무장대 활동? 근거는 보수언론 보도

제주지법 어제 4·3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 변론
검찰, 재심 청구 68명 중 4명 좌익활동 등 의심
김종민 4·3중앙위원 "검찰이 제시한 자료 허술"

검찰이 검증도 안된 자료로 제주4·3희생자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4·3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김종민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이 "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이 4·3 당시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희생자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종민 위원은 희생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 제민일보 기자 재직 당시에는 7000명이 넘는 증언을 채록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의 주장대로 희생자 4명을 규정하면 ▷남로당 핵심 간부이며, 월북 후 남파 간첩으로 활동한 김민학(1922년생) ▷북촌리 남로당 조직부장으로 경찰 후원회장을 살해한 이양도(1927년생) ▷한림읍 대림리의 폭도대장 임원전(1920년생) ▷형무소 수감 중 월북해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중국으로 탈출한 문옥주(1919년생)로 바뀐다. 근거는 대부분 보수 성향 언론사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검찰의 주장을 청취한 김 위원은 자료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 자체가 교차 확인, 다른 사료와의 대조 등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4·3 취재 당시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증언을 채록했다. 그 중에는 4·3 당시 토벌에 나선 제9연대 부연대장 등 군·경의 핵심 간부도 있었다"며 "이후 다른 증언과의 교차 검증, 4·3 관련 사료와의 대조 절차를 거쳐 정말 사실로 보이는 것만 보도했다. 여기에 당사자들이 기사를 읽는 사후 검증까지 이뤄졌다"며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이러한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 '희생자 제외 기준'에 대해서는 "김민주(김태형)·김봉현이 쓴 4·3무장투쟁사와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나온 인물이 핵심간부 혹은 수괴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장투쟁사는 좌익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고, 미군 보고서는 남로당 간부 명단이 자세히 열거돼 있다. 4·3중앙위 희생자 의결 때도 이 두 권의 책을 토대로 진행한다. 그런데 검찰이 의심하는 4명의 이름은 두 권의 책에서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의 증언을 모두 들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상 검증을 할 생각도, 할 능력도 없다"며 "(희생자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뒤 변론기일을 종료했다. 송은범기자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이 2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희생자 재심청구 두번째 심문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김광수 교육감 첫 간부급 인사 단행
변숙희 총무과장·송성한 교육박물관장 등 14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다음달 1일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14명에 대한 인사 명단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서기관(4급) 인사로는 변숙희 제주교육박물관장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제주교육박물관장에 송성한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는 강동선 총무과장이 전보 발령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직무능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배치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무관(5급) 인사 명단.

▷소통지원관 김현숙 ▷안전복지과 현미영 ▷미래인재교육과 박정환 ▷체육건강과 강미선 ▷총무과 한경미 ▷교육재정과 고영국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김효선 ▷애월고 임경희 ▷함덕고 김성부 ▷제주시교육지원청 변선희.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 무더기 적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생활질서계)는 지난 22~26일 제주동·서부경찰서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 불법 도우미 영업 및 주류판매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5개소의 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캔맥주·소주 등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 등 위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공사 현장소장 징역형

사망사고를 야기한 공사 현장 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타운하우스 보수 공사 현장소장이며 B씨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C씨가 약 3.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인해 기소됐다. A씨는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을뿐더러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다. 송은범기자

휴가철 바가지 요금 "꼼짝마"
제주시, 물가관리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휴가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제주시가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제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제주를 찾는 피서객이 급증하면서,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위생관리과와 상인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물가관리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해수욕장, 관광지, 전통시장 등의 현장을 중심으로 피서용품, 외식비, 농·수산물 등 중점관리 5개 분야에 대한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한다.

아울러 부당요금 징수,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해 휴가철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상인회 등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전개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경찰 장악 시도 중단하라"
전국 18개 시민단체 성명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가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국 신설은 자치분권 거스르는 명백한 퇴행이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역운동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행정 각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무범위 밖의 지휘·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위법하다"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영기자

2022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개최를 축하합니다

[광고]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20408-중-137624호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작은실천

예약 및 문의 064) 740-0200

건강검진 받으세요!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제주]